

2013. 11. 14. (목)

## 2013도4430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통합진보당비례대표경선관련폭력사태)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 제2부는 2013. 11. 14. 2013도443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김소영 대법관 주심)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범인도피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 상고기각)

### I.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 가. 사안의 개요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에서 공동대표이자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등을 공동으로 상해 및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범인(박수정)을 도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임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박수정, 김배곤, 김창년, 황왕택, 허근영, 김보섭, 이명원, 한현호, 김흥열, 정윤수

위 피고인들 및 박영재(2012. 6. 22. 사망)는 2012. 5. 12. 14:40경 통합진보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각각 참석하였음

당권파 당원들은 중앙위원회 개회 이전부터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개회 이후에도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참관인들은 국민참여당계 중앙위원들 일부의 자격 문제 등을 내세워 의사 진행 발언을 하거나 집단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였음

그러던 중 같은 날 21:40경 회의를 주재하던 심상정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 수십 명은 중앙위원회의 안건 가결을 저지하고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일제히 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운영요원 또는 당직자 등을 상대로 단상 점거 등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음

피고인 한현호는 단상 앞쪽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위원 발언용 마이크를 잡고 위안건 가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에 호응하여 박영재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오자 이들과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였음 **(일줄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함. 아래도 같음)**

피고인 이명원은 안건 가결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쳤음

피고인 김보섭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고, 이후 단상 아래로 내려와 단상 위쪽에 서 있던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고 단상 아래쪽으로 당겼음

피고인 김홍열은 앞서와 같이 박영재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올 때 이들과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고, 이후 피고인 김보섭이 위와 같이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아당길 때 함께 그 질서유지인을 잡아당기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였음

피고인 황왕택은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서로 밀고 잡는 등으로 몸싸움하면서 대치하던 중 불상의 여성을 밀쳐 쓰러뜨리면서 단상 오른쪽 계단을 통해 단상으로 올라가 다른 당원들로 하여금 뒤따라 단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어 단상 위에서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질서유지인인 피해자 김주민(37세)을 피고인 김배곤이 쓰러뜨릴 때 함께 피해자 김주민을 밀쳤음

피고인 김배곤은 다른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있던 중 단상을 점거한 당

원들을 제지하고 있던 한 남자의 팔을 잡아당겨 단상 아래로 떨어뜨리고, 이어 피해자 김주민의 목과 팔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김주민의 등 부분을 발로 차 단상 아래로 떨어뜨렸음

피고인 김창년은 단상 위로 올라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어 한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음

피고인 박수정은 단상 위로 올라간 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해자 조준호(53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오른손으로 조준호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왼손으로 조준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박영재는 피해자 조준호의 목과 팔 부분을 잡고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 조준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정윤수는 오른손을 뺀어 피해자 조준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조준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음

피고인 허근영은 다른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이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있던 중 “진실을 은폐한 진상조작보고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든 상태로 단상 위로 올라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친 후 들고 있던 피켓을 바닥에 내려치고, 이어 회의 재개를 막기 위해 단상 바닥에 드러누웠음

그 외에도 위 당권파 중앙위원과 당원 수십 명은 위와 같이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아래를 점거하면서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을 막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피해자 조준호를 비롯한 심상정, 유시민 등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박수정, 김배곤, 김창년, 황왕택, 허근영, 김보섭, 이명원, 한현호, 김홍열, 정윤수는 박영재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조준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가하고, 피해자 김주민 등을 폭행하였음

- 업무방해 : 피고인 박수정, 김배곤, 김창년, 황왕택, 허근영, 김보섭, 이명원, 한현호, 김홍열, 임진모

피고인 박수정, 김배곤, 김창년, 황왕택, 허근영, 김보섭, 이명원, 한현호, 김홍열, 정윤수는 전향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향과 같이 심상정 의장의 강령개정안 가결 선포에 즈음하여 이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및 당원들과 함께 단상 앞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아래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조준호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음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임진모도 단상 앞쪽으로 나가, 그곳에서 ‘강행처리 반대’, ‘진상조작보고서 전면 폐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던 수십 명의 당권파 당원들과 함께 서서 그곳을 점거한 채로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 등에 항의하였음

피고인들 및 위 당권파 당원들이 위와 같이 단상 앞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아래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조준호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자, 심상정 의장 등 대표단은 부득이 회의 진행을 중단한 채 회의장 밖으로 피신하였고, 대표단이 퇴장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권파 당원들은 “불법 중앙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단상 위·아래를 계속 점거하면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심상정 의장 등 대표단은 결국 같은 날 23:30경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였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영재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및 당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

#### - 피고인 임진모의 범인도피

위 피고인은 2012. 5. 31. 18:41경 원주시 단계동 811-3에 있는 단계 우편취급소 앞에서, 위 제2, 4항과 같이 조준호에 대한 상해 등의 범행을 한 후 도피 중인 박수정을 피고인 소유의 89라6915호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리고 가 박수정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족에게 전화 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 박수정에게 도피 교통수단 등을 제공함

## 다. 소송의 경과

-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2. 12. 24. 선고)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13. 3. 29. 선고) : 일부 파기 재판, 나머지 항소 기각

피고인	죄 명	1 심	2 심
김배곤	공동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징역 8월, 집유 2년 공동폭행 일부무죄	징역 8월, 집유 2년 <sup>1)</sup>
김창년	“	징역 8월, 집유 2년 공동폭행 일부무죄	징역 8월, 집유 2년
황왕택	“	징역 8월, 집유 2년 공동폭행 일부 무죄	징역 8월, 집유 2년
허근영	“	징역 6월, 집유 2년 공동상해 무죄 공동폭행 일부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김보섭	“	벌금 200만원 공동상해, 공동폭행 각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이명원	“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한현호	“	벌금 200만원 공동상해, 공동폭행 각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김홍열	“	벌금 200만원 공동상해, 공동폭행 각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임진모	업무방해, 범인도피	벌금 400만원	항소기각

## 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 일부 피고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당한 자위성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

##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 1. 피고인 임진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1) 피고인 김보섭, 한현호, 김홍열이 질서유지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함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임진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박영재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조준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김주민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나 폭행의 개념, 공모공

동정범의 성립 또는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박영재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거나 그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

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범인도피에 관한 피고인 임진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임진모가 범행 후 도피 중인 피고인 박수정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